특집 01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전략과 향후 발전 방향

윤정태 (행정안전부)

목 차 »

1. 서 론
2. 스마트 전자정부
3. 결 론

1. 서 론

1.1 전자정부 추진 경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시발점은 1987년부터 시작된 행정, 국방, 공안, 금융, 교육·연구 5대 국가기간전산망 추진과 주민등록, 부동산, 고용, 자동차, 통관, 경제 통계 등 국가 기본 DB 구축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개별 부처와 지자체로 정보화가 확산되었는데, 이후 체계적 전자정부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년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전자민원 G4C, 전자조달, 홈택스(Hometax) 시스템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국책과제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3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민신문고 등 31대 과제로 확대되어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전자정부 추진 과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서도 매우 이른 시점에 과감히 이루어 졌는데, 산업화는 늦게 이루어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겠다는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국가전체로 확대되어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과 재원(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하고, 정보

〈표 1〉 국가정보화·전자정부 발전 단계

<table>
<tr><td rowspan="2">단 계</td><td>도입기</td><td colspan="3">성장기</td><td>성숙기</td></tr>
<tr><td>1987~1994</td><td colspan="2">1995~2000</td><td>2001~2007</td><td>2008~현재</td></tr>
<tr><td>국가정보화</td><td rowspan="3">국가기간전산망
행정정보 DB화</td><td colspan="2">정보화촉진기본계획
Cyber Korea 21</td><td>e-Korea Vision 2006
u-Korea 기본계획</td><td rowspan="2">국가정보화기본계획
스마트 전자정부</td></tr>
<tr><td>전자 정부</td><td>부처별
정보화</td><td>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td><td>전자정부 11대 과제
전자정부 31대 과제</td></tr>
<tr><td>기반 구축</td><td colspan="3">초고속정보통신망</td><td>WiBro, RFID/USN,
DMB, IPTV</td></tr>
</table>

화촉진기본계획 수립·추진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에 매진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정보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기존의 정보화촉진계획과 전자정부를 통합하여 ICT 활용 중심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2 전자정부 추진 성과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2012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임이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으로는 첫째로 정보화를 국가 선진화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대통령·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성공요인은 1986년 한국형 전전자교환기(TDX), 1996년 CDMA개발과, 전자정부 11대·31대 과제 추진 등 명확한 목표설정과 과감한 투자(국가정보화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새로운 것, 빠른 것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국민들이 정보화 서비스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들의 전자정부 인지도는 2011년 92.4%,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2011년 63.5%로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의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1.2.1 대국민(對國民)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종합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는 5,000종의 법정민원사무 안내와 3,000종의 민원 신청, 1,200종의 인터넷 민원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민원24에 가입한 회원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하루 평균 2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권리·이익의 침해 등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 개선 및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등의 기능을 통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는 2005년 4월 개통되어, 현재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44개 해외공관, 사법부 및 18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2005년 개통 당시 약 12일 소요되던 전체 고충민원의 평균 처리시간은 2010년 6.1일로 단축되었다.

이외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pr.share.go.kr)를 운영하여 행정기관간 민원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기관방문을 최소화하고 있다.

1.2.2 대기업(對企業) 전자정부 서비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조달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기업은 G2B시스템에 한 번만 등록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4만 3,708개의 수요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자조달 규모는 63조 8,485억 원, 전자계약이용률은 97.9%이다. 나라장터는 전자정부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자금지원 정보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지

원 단일창구(www.g4b.go.kr)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민원 행정안내(3,886종), 기업민원 사례(3,604건), 기업행정민원 신청 연계서비스(742종)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 결과, 평균 10단계 17일이 소요되던 법인 설립 신청 기간이 3단계 5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출입을 위한 전자통관서비스(UNI-PASS, portal.customs.go.kr), 국내·국제 특허 출원을 위한 '특허로'(www.patent.go.kr), 종합세무행정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 등 기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3 정보화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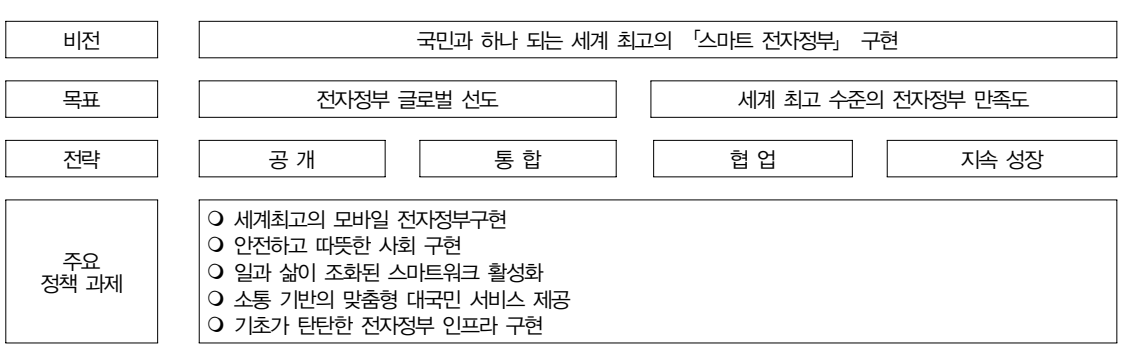
2006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로 대변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의 폭발적 성장은 사람간의 의상소통 방식을 바꾸었고, 사회·문화·경제의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2007년 등장한 iPhone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의 재스민 혁명 등 정보화가 전 세계적 규모의 변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9년 12월 80만 명에 불과하던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2년 3,00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스마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 초기에는 국내 핸드폰 제조 기업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삼성전자가 2012년 2분기 전 세계 시장점유율 32.6%(판매량 기준)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스마트 시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무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등 스마트 기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시대로의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2011년 3월 정부는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스마트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2. 스마트 전자정부

2.1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개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는 진화된 ICT기술과 정부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



(그림 1)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스마트 전자정부 전략'은 '국민과 하나 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전자정부를 선도하고 대내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만족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1.1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전략

스마트 시대 전자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는 공개, 통합, 협업, 지속 성장이 있다.

첫째, 공공 정보·서비스의 공개와 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에서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 및 서비스를 개방하여 민간의 창의성이 정부의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채널과 매체위에서 전자정부 사용자인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어야 한다. 여러 개의 유관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일괄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셋째, 국민 중심의 예방 행정, 맞춤형 행정, 현장 행정, 융합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간 협업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조직·부서간 협업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문화 및 제도의 정착도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친환경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전자정보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1.2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아젠다 및 세부과제

스마트 전자정부 전략은 ①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②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③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④ 소통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⑤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의 5대 아젠다와 4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24·홈택스·나라장터·국가대표포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존 정보시스템들을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이동성·카메라·위치기반·증강현실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생활 불편신고 서비스」,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 서비스」 등 기존 PC환경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대거 발굴·추진하고 있다.

둘째,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범죄 지도를 구축하고, 미아·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중이다. 아울러, 센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D 기반 입체적 관제시스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선 통합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진·홍수·산사태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구제역 등 가축 질병관리 전 과정(예방, 예찰, 통제,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신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할 계획이다.

셋째,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의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현장업무 지원 및 이동 중에도 전자결재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

하여 원격영상회의, 사이버 협업 일터 등 「디지털 행정협업체계」를 구축중이다.

넷째, 소통 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세금 및 공과금 등 공공기관에서 제각각 제공하던 정보를 국민 중심으로 통합·일괄 제공하는 「생활정보 통합 알리미 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을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국민 누구라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스마트폰 도난·분실, 악성코드 감염, 무선구간 해킹 등 신규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보안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기존 전자정부 추진 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전략'은 스마트 시대의 차세대 전자정부의 이정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가 2012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2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2 스마트 전자정부 주요 과제 사례

2.2.1 모바일 전자정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PC(Web) 기반 서비스가 모바일 서비스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정보 공유 및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수요도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모바일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까지 대국민, 내부 업무, 현장 행정 분야의 917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을 2011년 8월에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모바일 행정업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기관의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바일 보안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2015년까지 총 505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한 배포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2.2 CCTV 통합관제센터

최근 경기 서남부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예방·해결과, 화재와 재난의 감시 등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책으로써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복 설치, 체계적인 관리 미흡,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서울 양천, 경기 광명 등 9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70개 시군구에 국비 426억 원을 지원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군구에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관이 상주근무하고, 별도의 전담인력이 CCTV를 관제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통합하여 관리중이다. 기존의 CCTV는 주로 사건·사고 발생 후 증거자료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대응 및 예방활동에 활용하는 등 CCTV 역할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또한 CCTV의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동물체를 검출, 분류, 추적하는 등 지능형 CCTV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한 결과, '어린이 안전 위해감지 서비스'는 서울 노원구, '문제차량 자동감지 서비스'는 서울 관악구를 선정하여 201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2.2.3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는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을 ICT를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20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근무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주요 거점에 구청·주민센터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영상회의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사무실과 동일한 사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택근무와 비교하여 업무몰입도 유지 및 복무관리가 용이하다. 현재 도봉, 분당, 잠실, 인천, 수원 등 총 10개의 센터를 81개 기관(37개 행정기관, 28개 지자체, 16개 공공기관)이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총 1만 1,056명이 이용하였다. 2011년 12월에 실시된 스마트워크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센터근무에 만족하고 있으며, 83.6%는 동료에게 스마트워크를 권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업무수행 및 일과 삶의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5.1%로 나타나는 등 스마트워크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이 스마트워크를 선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전 국가로 스마트워크를 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디지털 협업 등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유연근무제, 성과평가 및 복무제도 등 스마트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2.2.4 정보화 역기능 대응

스마트 기기의 확대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보호,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발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SW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추진하고 있다. SW 개발보안 제도는 2012년 12월말부터 40억 원 이상의 정보화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되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 분실시 원격 데이터 삭제 등 모바일 행정서비스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모바일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보안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스마트 시대 전자정부 보안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민·관의 적극 대응을 통하여 2010년 8.0%의 인터넷 중독률이 2011년 7.7%로 개선되었으나 스마트폰 중독률은 8.4%, 유아동 중독률은 7.9%로 여전히 심각하다. 정부는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 전문 강사 양성, 유치원 대상 방문 교육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중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3. 결 론

변화의 폭과 깊이가 큰 정보화 분야에서도 스마트 시대로의 전환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변화이며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

향도 매우 크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전자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편리한 삶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정보화가 중요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한 현시점에서 전자정부는 국가·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CCTV 통합관제 등 ICT를 활용한 사회 안정망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Fast-Follower에서 ICT 신기술 융합, 타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First-Mover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UN 전자정부 2연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해외에서 벤치마킹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해외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ICT의 중요 이슈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선제적, 혁신적, 창조적인 서비스를 창출하여야 할 단계이다.

셋째, 이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2011년 전자정부 수출액은 2억3566만 달러로서 2002년 10만 달러와 비교하여 2,300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만 51개국 203명의 해외 고위급 인사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전자정부 사례를 배워갔다. 따라서, 향후 전자정부 추진시에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합전산센터, 전자조달, 전자통관,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 전자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10대 브랜드'로 육성중이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이 세대와 계층을 망라하는 사회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원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정보화가 인류의 혜택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보화 역기능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행정안전부,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안). 2011년 3월
[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2012년 1월
[3]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2: E-Government for the People, 2012년 2월
[4] 한국정보화진흥원, Smart Society 실현을 위한 IT이슈와 전략, 2011년 3월
[5]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국가정보화백서, 2012년 8월

저 자 약 력

윤 정 태

이메일 : jungtae@mopas.go.kr

- 1997년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학사)
- 1999년 서울대학교 전산과학과(석사)
- 1999년~2006년 LG CNS 과장
- 2006년~현재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국가정보화 담당 사무관
- 관심분야 :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정보보호